

# 장인화 “포스코, 철강·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초일류 도약”

〈포스코그룹 회장〉

## 7대 미래혁신 과제 발표

철강 원가절감·이차전지 투자 지속  
신사업 미래소재 분야 특화 발굴·육성  
2026년까지 저탄소생산 전환 등 실행

포스코그룹이 신뢰받는 초일류 혁신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7대 미래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22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전략세션에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통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체제 전반을 혁신해 초일류 기업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미래혁신TF’를 가동해 그룹 경영 현황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 및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의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7대 미래혁신 과제는 ▲철강경쟁력 재건 ▲이차전지소재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 본원경쟁력 쟁취 및 혁신기술 선점 ▲사업회사 책임경영체



3월21일 포스코그룹 제10대 회장으로 선임된 장인화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소통하고 있다.

제 확립, 신사업 발굴체계 다양화 ▲공정·투명한 거버넌스의 혁신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원칙에 기반한 기업 책임 이행 ▲조직·인사혁신 및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비즈니스 측면에서 철강은 초격차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차

전지소재는 미래 성장가치가 높은 우량 자산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이어간다.

철강은 불확실한 경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원가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고 수익성 측면에서 철강 설비를 효율화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원가 절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전기로를 활용하고 고급강 생산기술 개발 및 수소환원제철기술의 단계별 확대 등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실행하면서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판매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차전지소재는 리튬, 니켈 등 올해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이차전지소재 핵심 원료 공장을 조기에 안정화 시킨다는 목표다. 지난해 말 준공한 광석리튬 기반의 이차전지용 수산화리튬공장인 포스코필라리튬솔루션은 이미 상업 생산을 개시해 안정적인 램프업을 진행 중이며,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아르헨티나 염호리튬 1단계 공장은 올 하반기 양산에 들어간다. 이와 더불어 리튬 염호, 광산과 같은 우량자원 투자도 나서 리튬메탈염금재 등 차세대 소재의 상업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핵심사업 이외의 일부 그룹 사업은 구조개편을 하고, 신사업은 미래소재 분야에 특화해 발굴, 육성한다. 특히 3년 내 유망 선도기업에 대한 M&A도 추진한다.

기업문화와 경영체제의 혁신도 가속

화한다. 성과 우수자 발탁 승진 확대 등 능력 기반의 인사를 시행하고, CEO 100일 현장동행 등 소통을 확대한다. 경영층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임원 급여는 최대 20% 반납하고, 주식보상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그룹 경영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지주회사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복장 자율화, 직급 호칭 개편 등 각종 제도의 개선과 지사·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체제 측면에서는 거버넌스개선 TF 운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CEO·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갖춘다. 또 포스코클린위원회 신설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신(新)윤리경영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를 적극 지원한다.

포스코그룹은 우선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천으로 추진하고,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 M&A 등 대형 과제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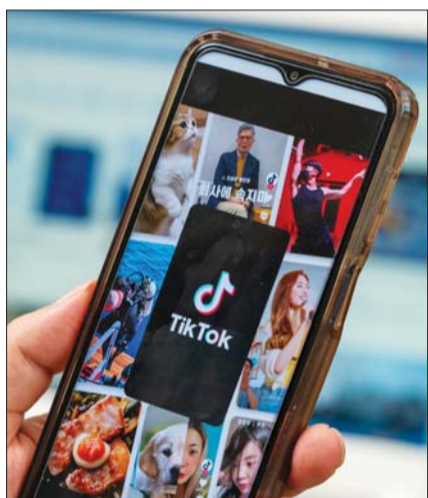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틱톡·바이트댄스, 美시장 퇴출 위기… “표현의 자유 짓밟혀” 비판

美 하원서 지분 매각 강제 법안 통과  
개인정보 수집·중국 정부 원조 의혹  
전 CEO “어떤 혐의도 없다” 주장  
中 정부 “자국의 기업에 매각 금지”

틱톡을 향한 미국의 공습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틱톡 내 설치된 백도어(Back Door·비인가 시스템 접근을 하는 악성코드)가 미국 시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 탈취하고 이를 중국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스파이풍선(Spyballoon)’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틱톡과 중국 정부 측은 이를 대(對)중국 견제이자 우량 기업 탈취 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가 21일(현지시간) 미국에 낸 성명을 통해 “미 하원이 중요한 대외·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인 1억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을 다시 강행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법안 서명 단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하원에서 360일 내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 정부는 틱톡과 바이트댄스를 미국 안보에 지대한 위협을 끼치는 ‘스파이벨론’으로 지목하고 정보를 판매하는 브로커로 규정했다. /유토이미지

계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미국 하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 일부를 수정한 데 따른

조치다. 수정된 부분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 매각 기한을 90일 연장할 영역이다. 기존 법안은 270일 내 매각을 강제했다.

외신은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미국 하원은 바이트댄스의 앱 소유권 지분 매각 법안을 앞서 통과시킨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패키지 법안과 연결시켰다. 패키지 법안은 중국의 미국 내 계좌를 통한 이란 원유 구입을 막음으로써 간접적인 이란 지원을 막는 내용을 포함한다.

틱톡 금지에 따른 파장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 측은 즉각 미국 기업인 왓츠앱 등의 퇴출에 승인했으며 “틱톡을 중국 외 기업에 팔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보호주의가 자국(미국)의 중요한 정신을 오히려 침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내 IT 관계자들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바이트댄스는 대규모 로비할

동과 함께 미국 내 앱 퇴출을 막기 위해 이용자 정보 접근을 통한 개인화 한 피드 제공 등 일반적인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활용한 기술까지 제외하고 주요 기밀 알고리즘을 제외한 코드를 공개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IT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중 유튜브와 메타는 틱톡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숏폼을 그대로 복제해 숏츠와 릴스를 만들어냈다”며 “이번 사태는 인종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틱톡의 전 CEO인 케빈 메이어(Kevin A. Mayer)는 “틱톡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회사”라며 “내가 아는 한, 중국 정부는 물론 타국이 정부와도 관계가 없다. 이번 사태는 옳은 일이 아니며 미디어와 수정헌법 1조(자유) 또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ABC 뉴스를 통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이

반에 통과한 법안이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은 틱톡이 법률적 대응에 나섰을 때 정부를 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상원 정보위원장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은 “많은 젊은이가 뉴스를 보기 위해 틱톡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틱톡이 새로운 선전 도구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 1억7천만명의 개인 정보를 훑어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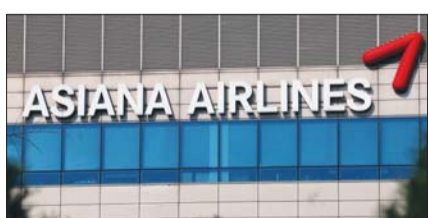
한국 내 IT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한국에 미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IT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한국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라면서 “틱톡의 법정 싸움이 시작 되면 기한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패소한다고 해도 매각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1% 간극에 난항…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

26일~내달 3일까지 쟁의행위 투표  
노조측, 기본급 8.5%·기타 수당 ↑  
사측, 연 7.5%·비행 수당 인상 제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지난 5일 회사와의 2023년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연 8.5%의 기본급 인상 및 기타 수당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는 연 7.5%의 기본급 인상과 비행 수당 인상을 제시하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뉴시스

며 결렬됐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측은 “국내 LCC들도 조종사 임금을 10% 가량 인상한 바 있다”며 “지난해 400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회사는 더 높은 인상을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노사간 갈등이 확대되면서 올해도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우선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투표 대상은 노조원 총 1123명으로 결과는 투표 마지막날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파업 등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임금협상 갈등으로 파업을 진행한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 조종사노동조합이 지난해 7월 16일 쟁의행위를 진행하면서 당시 인천에서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국제선 왕복 항공편이 결항된 바 있다.

문제는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시점이 6, 7월로 예상되면서 현실화될 경우 여름 성수기 이용객들의 불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5년 노조 파업으로 2328편의 운항 차질, 여객 1304억원, 화물 966억원 등

모두 227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항공운수사업이 2006년 12월부터 필수공익사업으로 적용되면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서도 필수인력은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악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경우 필수유지 업무 비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신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 이상 필수조종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에도 2022년 임금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대립한 끝에 파업 목전까지 갔다가 기본급·비행 수당 2.5%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양성문 기자